"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전북, 아직 용역에만 의존"

김대중 도의원, "타 지자체의 발빠른 행보에 주목해야"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영 도지사의 공약이지만, 정부는 대상 기관조차 아직 정하지 않았고 전북도는 정부와 타지자체 눈치만 보며 미적거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1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사업의 흔들림 없는 공약 이행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정부와 전북도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지난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용없듯이 성공한 균형발전 정책이 되려면 추가 이전을 임기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며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과거 전북은 LH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은 바 있고 농진청을 비롯한 산하 5개 기관 등 모두 6곳이 국가 기관이라 다른 곳에 비해 동반 이전 기업유치 효과도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실수를 막으려면 전북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만 하지만 전북도는 아직도 용역 중이라며 분석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전북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당위성 논리 발굴 명목으로 3개월짜리 용역을 발주했다. 공공기관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는 3월에 종료되는 용역결과에서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5년 전, 전북도는 중점 유치 희망 공공기관 45곳을 이미 선정해 놓았지만, 이들 기관이 다른 지자체와 경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유치 대상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반면, 부산의 경우 지역 국회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전북이 그토록 희망했던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이 대선공약으로 확정돼 눈독도 못 들이는 상황이 됐다.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일찌감치 공공기관 유치전에 사활을 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전북은 너무나도 여유가 넘쳐 보인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덧붙여 그는 "용역에만 의존하는 용역행정은 그만하고 타 지자체의 발빠른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연초 업무보고에서 올 상반기 안으로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부턴 이전 가능 기관부터 이전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혀 각 지자체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김대중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시가 인근에 있는데도 대전은 혁신도시 추가 유치에 성공했다"면서 "전북이 처한 낙후도와 소멸위기 상황을 적극 알리는 등 전북도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며 후속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는 13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강태창 의원 부위원장에 윤영숙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지원 최선"

도의회 특자도 지원 특위 출범… 위원장 강태창 의원 · 부위원장에 윤영숙 의원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는 13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강태창 의원 부위원장에 윤영숙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의회는 제3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과 특위 위원 선임안을 의결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강태창 위원장(군산1), 윤영숙 부위원장(익산3)을 비롯한 김성수(고창1)·박정규(임실)·송승용(전주3)·염영선(정읍2)·임승식(정읍1)·서난이(전주9)·이수진(비례)·전용태(진안)·한정수(익산4) 위원 11명으로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 18일 특별법 시행 이전까지 전북민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북에 특화된 특례를 발굴하여 입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강태창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우리 도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지원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신속히 중앙정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기회발전특구 · 교육자유특구 지정 노력 필요"

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세미나

전북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전북도의회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 전주10)는 1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강영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소속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강사로 초빙됐으며,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들과 균형발전에 관심있는 도의원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강영환 위원장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의 좋은 일자리 발굴과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라북도 자산에 입각한 특수한 기업유치 환경을 조성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유리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교육자유특구'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글로벌 인재 육성형과 지역소멸 대응형 중, 유리한 모델을 선택해 준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연 전북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전북의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지방정책 핵심 과제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를 위해 도와 정치권 모두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자세가 필요하다"며 상호 공조를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도의회 임시회 5분 발언

"산불진화 헬기 운영 효율성 저조… 예산 증액해야"

장연국 도의원, "지난해보다 담수 능력 떨어져"

새만금잼버리 성공 개최 관련 "안전대책 마련을"

산불진화용 임차 헬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도가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전북도의회 제397회 임시회에서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교육위)은 5분 발언을 통해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예산 증액 필요성과 잼버리대회 성공을 위해 더욱 강화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연국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전라북도 제1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기후변화로 최근 발생하는 산불은 대형화·장기화 그리고 연중화되면서 발생 범위도 전국 곳곳으로 번져가는 특성이 있다"면서 "산불예방과 함께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위한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산불진화 시 가장 필요한 것은 헬기라면서 올해 전북도의 관련 예산을 늘었지만, 산불진화 능력은 더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도는 약 22억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3대의 헬기를 임차했고, 총 담수능력은 8,300리터였다. 그러나 올해 8,000만원이 증액된 약 22억9,000만의 예산으로 3대의 헬기를 임차했지만, 총 담수능력은 6,400리터로 줄었다는 것이다.

장연국 의원은 "어쩔 수 없이 노후화된 헬기를 임차하더라도 임차 헬기 정비체계를 제대로 검증하는 한편, 담수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올해 치러지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더욱 강화된 안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4만 명의 이동을 위해 버스 2,250대, 일 평균 700여 대의 버스가 움직여야 한다"라며 "여름 휴가철 교통혼잡과 교통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잼버리병원을 종합병원급으로 운영하고, 닥터헬기 이착륙을 위한 헬기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척지인 행사부지 특성을 고려해 "해충방제를 위해 발생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치안, 대테러, 재난안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더욱 강화된 안전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노후 아파트 관리정책 부재… 주택관리정책 적극 추진을"

양해석 도의원

전북도의회 양해석 도의원(남원2)은 제39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의 관리정책이 부재하다며 대책 촉구에 나섰다.

양해석 도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전국 광역도 기준 노후아파트 비율이 전북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관리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2015년 기준 8개 광역도 중 2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가 전체 아파트의 38%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 노후화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1년 현황 역시 여전히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7년 전과 비교할 때 도내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는 무려 8만9,142세대가 늘어나 현재는 22만7,803세대로 증가했으며, 전북도 전체 아파트 중 노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도 38%에서 53.6%로 훌쩍 높아졌다.

시군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5년에는 남원시 단 한 곳만이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절반을 넘었지만(50.4%), 2021년에는 무려 7개 시·군의 노후 아파트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양 의원은 "과거 2~30년 전 관 주도로 이루어진 대규모 도시개발과 공급위주 주택정책의 결과가 현재 우리지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노후 아파트다."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그 양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노후 아파트는 더 이상 개개인의 사유재산으로서 민간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다수의 안전과 편의가 걸린 지역의 문제이자 공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 의원은 비의무관리 노후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가 아니다 보니 시군에서조차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전북도가 나서 비의무관리 아파트의 관리실태 파악 및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지역맞춤형 주택관리지원,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재건축 유도 정책 추진을 김관영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가뭄 대비 농업 관개용수 확보 대책 미비"

김정기 도의원 "저수지 준설 통해 저수용량 확보 노력을"

김정기 전북도의회 의원(부안군)이 전북도의회 제397회 임시회에서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5분 발언을 통해 최악의 가뭄에 대비해 도내 농업 관계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시설 정비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개년 동안 옥정호의 저수율을 확인한 결과 작년 한 해 옥정호의 연평균 저수율은 33.6%에 불과했으며, 이것은 2020년 61.2%와 비교해 절반이나 줄어든 것이다.

김 의원은 "옥정호의 저수율이 낮아지면 섬진강댐 주변지역의 관개용수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농어촌공사 측은 부안댐의 물과 인근 관정, 그리고 하천의 물까지 끌어들일 수 있도록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대로는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유례없는 가뭄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무방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며 가뭄대비를 위해서는 농업 수리시설을 정비부터 서둘러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도내 농업용 저수지의 대다수는 당초 건설 당시부터 저수용량이 크지 않은데다 세월이 갈수록 토사와 퇴적물이 쌓이면서 저수용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저수용량을 확보하기 더욱 힘들다며 저수지 및 용배수로 개보수사업과는 별개로 저수지 준설사업을 통해 저수용량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북도는 도내 2,188개 농업용 저수지 등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작년에는 도·시군비를 합해 70억을 편성했으며 올해 역시 물가상승분을 고려한다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100억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재훈 기자

4·5 전주을 재선거 민주계 무소속 후보 단일화 '점화'

임정엽, 최근 김호서 측 단일화 발언에 "준비돼 있다" 입장

오는 4월5일 국회의원 전주을 재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인 임정엽, 김호서 후보 간의 단일화 움직임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김호서 예비후보가 밝힌 후보 단일화 용의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무도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능력없고 무책임한 정운천 후보가 또다시 전북을 농락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후보 단일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호서 예비후보의 '단일화 용의' 발언은 민주시민의 목마름을 일거에 해소해주는 한줄기 샘물과 같은 결단"이라며, 이같이 화답했다.

그는 1년 2개월 남은 비례대표 임기를 내팽개치고 재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를 강도높게 비판한 김 예비후보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라며 적극 공감도 표했다.

앞서 김호서 예비후보는 지난 9일 기자회견 중 후보 단일화 질문에 대해 "지금은 선의의 경쟁을 펼칠 때라면서 단일화 거론은 야합"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도내 유권자들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당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일화를 명령한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정엽 예비후보는 "단일화에 대해 아직까지 후보 간 구체적 대화는 없지만 서로 공감을 찾아서 얘기를 해봐야 할 때이다"라며 단일화에 희망 섞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임정엽 예비후보는 정책과 관련해 "제가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는다면 확실하게 전북몫을 찾아오겠다"면서 △지역별 국가예산은 국가예산 증가율 평균치에서 0.5% 오차범위 내 준수 △국토 균형발전지수 적용해 균형 배정 △전북·강원·제주 등 특별자치도는 최우선 배려 법제화 등을 약속했다. /뉴시스